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76
----------	------

2021년 11월 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0. 15. 이준형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10. 20.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1년 11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현장에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민간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어 일자리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은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에 따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청년청 등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환경의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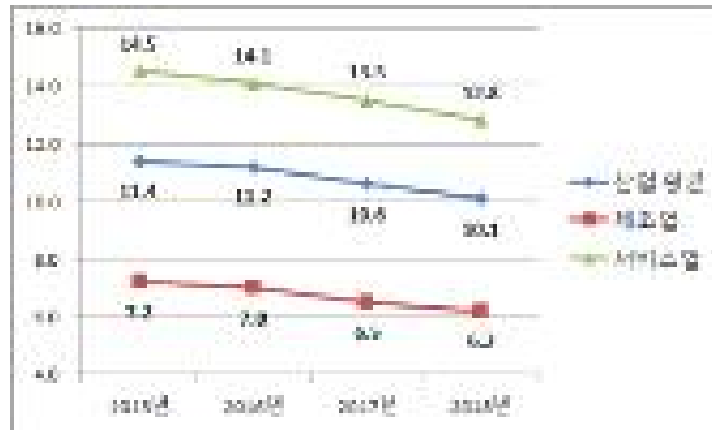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자동화·무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¹⁾
- 한국은행이 '20년 6월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8년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²⁾는 10.1명으로 2015년 11.4명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업종별로 보더라도 제조업의 경우 2015년 7.2명에서 2018년 6.2명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2015년 14.5명에서 2018년 12.8명으로 유사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1)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보도자료, 2020-06-24).

2)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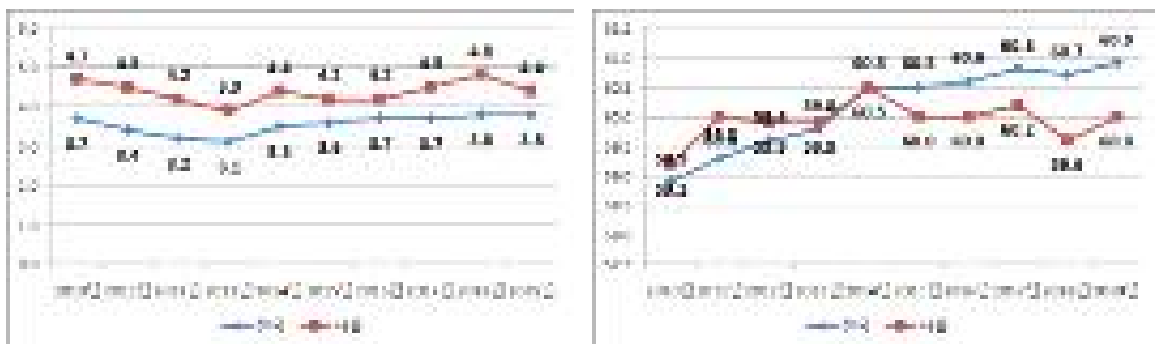
〈그림 -1〉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2015~2018년)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

- 대표적인 고용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을 보면, 지난 10년 간 두 지표 모두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고용률의 경우 약간 상승하기도 했으나, 서울특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19년 기준 전국 평균 실업률은 3.6%인데 반해 서울 평균은 그보다 0.8%p 높은 4.4%를 기록하였으며,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0.2%인데 반해 서울 평균은 그보다 0.3%p 낮은 59.9%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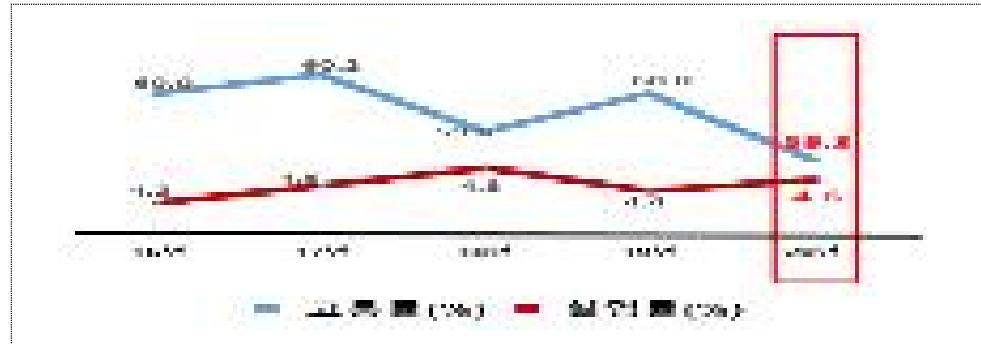
〈그림-2〉 실업률과 고용률 : 서울시와 전국 비교 (2010~2019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20년 서울시 고용현황³⁾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임.

〈그림-3〉 최근 5년 간 서울시 고용 및 실업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근거로 5년 단위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2018년 수립)과 1년 단위 ‘서울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21년 서울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래형 일자리 적극 창출이라는 비전(붙임.1)아래 6개 추진전략과 22개 추진과제(붙임.2)를 설정하고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정책기획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추진과제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3) 「2021년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서울시 경제정책실, 2021. 3.

- 다른 한편, 서울시 일자리 창출 실적⁴⁾을 보면 2015년 전체 일자리는 210,379개에서 2019년 375,505개로 지난 5년간 78.5% 증가했으나, 연도별 일자리 실적 증가율에 있어서는 2016년 34.6%, 2017년 14.1%, 2018년 11.3%,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4〉 서울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도별 일자리 실적 증가율 (2015년~2019년)⁵⁾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저성장 추세, 전국 대비 서울시의 저조한 고용 지표 속에 서울시 일자리 정책대상이 세분화 되고 여러 실·국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실업률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구성결의안과 같이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

4) 서울시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2016~2019). 서울시 경제정책실.

5) 직접 일자리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실업자 등 미취업 시민에게 생계유지, 자활발판 제공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이며, 간접 일자리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민간지원 등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의미함.

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됨.

- 또한 일자리 정책의 사업부서가 서울시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정책기획관 등 여러 상임위의 소관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⁶⁾
- 다만, 이미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와의 중첩과 구성목적이 유사한 특별위원회⁷⁾와의 활동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2876)이 운영위원회에 회부(21.10.15)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준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7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준형, 권영희, 김인제,
김제리, 김희걸, 노승재,
서윤기, 이광호, 이태성,
최 선 의원(10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현장에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민간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어 일자리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은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에 따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청년청 등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환경의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헌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과 국가가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국정운영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만큼 일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러나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민간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의 무인화·자동화로 인한 민간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여성, 노숙인,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순노무 위주의 공공근로를 경력형성형 일자리인 뉴딜일자리로 확대한 바 있다.
- 또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 취업준비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스쿨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 그러나 노숙인, 장애인, 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정책대상이 세분화됨에 따라 각각의 소관 실·국에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도 수행하여,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실·국에서 시행되는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성장이며 행복임을 선언 하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환경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